

# 지역 백년대계 선진적 고등교육과 대학 공공성 강화

일시 2024. 11. 22.(금) 15:00~17:30

장소 평택대학교 본관 회의실(3층)

## 환영사

남중웅 전국교수연대회의 상임대표

## 인사말

남정희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박종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노태호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김정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장

##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기원 김문수 김준혁 김현정 이용우 정을호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

## 제1부 '고등교육 개혁' 전망

좌장 김선일(민교협 정책위원장/경희대 교수)

기조발제 송주명(전국교수연대회의 집행위원장/한신대 교수)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발제 1 정세은(민교협 공동의장/충남대 교수)

"대학 자율성 · 공공성과 고등교육정책 현안"

발제 2 선재원(전국교수연대회의 공동대표/평택대 교수)

"지역 백년대계와 대학 공공성 강화"

## 제2부 '지역 백년대계' 방안

좌장 이은우(평택시민재단 이사장)

공성경(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기홍(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

박철웅(민교협 공동의장/목원대 교수)

송치용(사회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정찬(평택대 재학생)

하태원(평택대 민주총동문회장)

주최 전국교수연대회의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회의(민교협2.0),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주관 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 · 전국교수노동조합 평택대학교지회



# 목 차

## 환영사

남 중 응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 상임대표	1
--	---

## 인사말

남 정 희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3
박 중 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4
노 태 호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	5
김 정 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6

## 축사

홍 기 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 갑)	7
김 문 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8
김 준 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 정)	9
김 현 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 병)	10
이 용 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을)	11
정 을 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
강 경 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3

## 발제

송 주 명 전국교수연대회의 집행위원장(한신대 교수) 기조발제 “ <b>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b> ”	15
정 세 은 민교협 공동의장(충남대 교수) 발제 1 “ <b>대학 자율성 · 공공성과 고등교육정책 현안</b> ”	23
선 재 원 전국교수연대회의 공동대표(평택대 교수) 발제 2 “ <b>지역 백년대계와 대학 공공성 강화</b> ”	35

## 토론

공 성 경 K-ESG평가원 전문위원 겸 평택지부장	45
김 기 흥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 겸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소장	46
박 철 응 민교협 공동의장 겸 목원대 교수	47
송 치 용 사회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49
이 정 찬 평택대학교 학생	51
하 태 원 평택대학교 민주총동문회 회장	53





## 환영사



남 중 응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 상임대표

<“지역 백년대계” 선진적 고등교육과 대학 공공성 강화> 전국교수연대회의 전국순회토론회 중 수도권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 상임대표 남중응입니다. 이번 토론회에 뜻을 모아 주신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김문수·김준혁·김현정·이용우·정을호 의원님,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토론회를 주관 해주신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와 전국교수노동조합 평택대학교지회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윤석열 정권의 파행적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의 폐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현상함에, 의로운 사회단체 및 교수 연구자와 「전국교수연대회의」가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의 대안적 방향을 확인하고, 에너지전환, 디지털대전환, 국제질서 재편의 급변하는 국제 여건과 인구절벽 · 지역소멸의 절박한 국내 위기 속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선진적 지역대학(클러스터)육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세계적 문화강국으로 나아갈 대안적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장입니다.

이 토론회는 좌장에 김선일 민교협 정책위원장, 송주명 전국교수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의 기조발제, 정세은 민교협 공동의장과 선재원 전국교수연대회의 공동대표의 발제, 그리고 종합토론 좌장에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토론에 공성경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기홍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위원장, 박철웅 민교협 공동의장, 송치용 사회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정찬 평택대 재학생, 하태원 평택대 민주총동문회장께서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2023년 1월 12일 전국7개 교수단체가 결성하여 출범하였고, 최근

1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파행적 정책에 대한 11회의 시국선언 및 기자회견, 11회의 국회 토론회, 9회의 워크숍 및 연대시위를 하였습니다.

선재원 교수가 상임의장인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남정희 교수가 위원장인 「전국교수노동조합」, 남중웅 교수가 위원장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김정구 교수가 상임회장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박중렬 교수가 위원장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노태호 교수가 위원장인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등으로 조직되었고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학교원을 대표하여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도한 중앙 집중, 지방 소멸, 불균형과 불공정, 분배의 실패, 대학 서열화 등으로 지방대학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학상황은 정부의 과도한 대학운영 개입과 통제, 그리고 반복된 정책실패 등으로 큰 혼란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대학구조조정을 대표하는 라이즈와 글로컬대학 30 사업 등 윤석열정부가 쏟아내고 폭주하는 시장만능주의적 고등교육 황폐화 정책들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강요되어지고 있으며, 건강한 학문 생태계와 지역균형 및 공공성의 파괴를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의 공공성과 학문생태계를 파괴하는 무전공제도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등의 노골적 강제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희망고문이고, 부실교육을 우려하는 대학에게는 재정적 인센티브라는 상호약탈식 재정지원으로 적자생존, 우승열패, 약육강식이란 밀림의 세계로 몰아, 구조조정이란 광풍 속에 빠져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의 제자들은 양질의 교육 환경-졸업 후 취업-행복한 정주 여건-꿈과 희망찬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책무로 귀결됩니다.

지금까지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윤석열정부 고등교육의 실패한 정책 반복과, 신자유주의적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 그리고 균형 발전을 이룰 정책의 수립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에 오늘 토론회가 혼란과 위기에 빠진 대학현상을 함께 고민하고 숙의하는 자리가 되고, 고등교육의 복잡하고 기형적인 구조적 문제에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정책의 제시로 대학 몰락을 막아 내는 사회적 책무를 함께 수행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 인사말



남 정 희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 평택지역 여러 단체처럼 교수노조들도 뭉쳐야 한다.

지난 11월 8일 오후 2시부터 민주노총 본부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 창립 23주년 기념토론회가 열렸다. 『완전한 노동3권 미확보로 인한 교수노조의 한계 및 대학혁신과 공공성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의미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자 중 한 분이 교수들의 노조가 국교조, 사교조, 전문대노조, 폴리텍대 연합노조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은 발전적 분화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발제자는 이는 발전이 아니라 퇴화라며, 산별노조로 크게 모여야 힘이 생긴다고 하였다. 민주노총이 16개의 산별노조밖에 없는 것을 보면, 쉽게 수긍이 간다. 교수들의 노조가 분화하여 각기 특성에 따라 자기의 권익을 추구하게 되면, 노조는 이익집단으로 변화해 갈 수 있다. 이는 운동성 약화를 가져오게 되어, 대학공공성 강화라는 혁신에서 멀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교원들의 노동3권 미확보가 토론 주제로 크게 떠올랐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일반노조법을 적용받아 완전한 노동3권을 갖고 있지만, 다른 교수노조들은 교원노조법을 적용받아 단체행동권이 없는 상태이다. 우리 노조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여 법적 투쟁 상태인데, 완전한 노동3권을 확보하여 비정규교수노조와 합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교수노조는 반쪽짜리 교원이라며 슬퍼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교원으로서 가장 먼저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였으니, 다른 교수노조들이 완전한 노동3권을 쟁취하도록 여론 형성 등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권 때문에 교사와 교수에게 파업권을 줄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이 정당한가 하는 토론으로 이어졌다. 교수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단체행동권을 받지 못했다면, 실제로 상당한 점유율로 강의를 하는 비정규교수들에게는 왜 단체행동권을 주었을까? 파업을 실행한 비정규교수노조의 경험을 들어보면, 강의를 하지 않는 방식의 단체행동은 없었다고 한다. 성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전부였다. 학습권과 노동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질문도 있었고, 노동권이 더 중요하다는 발제자의 답변이 있었다.

이렇듯 위의 토론회에서는 여러 교수노조가 뭉쳐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는데, 이미 평택지역에서는 여러 단체가 뭉쳐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있어 타 지역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지역 대학의 공공성 확보이건 지역 노동 문제이건 여러 단체가 모여 함께 의논하고 실천하면, 그 지역은 매우 활발한 소통의 장이 형성될 것이다. 나는 평택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문제해결의 방식이 매우 의미 있다고 본다. 아래로부터의 문제해결 방식이 그 지역을 살릴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평택지역의 운동 방식을 지켜보고 있다. 교수노조들도 하나의 산별노조로 뭉치고, 완전한 노동3권을 확보한 후에는 비정규교수노조와도 뭉치기 바란다. 그 후에는 각 지역마다 다른 단체들과도 뭉쳐서 지역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 인사말



박 중 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박중렬입니다.  
전국교수연대회의 전국순회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대학이 자본의 시장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자본과 노동을 이전하는 것처럼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대학, 국립대와 사립대, 지역거점대학과 중소대학의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의 주체인 교수와 학생은 취업과 교육연구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의 공공성은 무너지고 있고, 대학 비정규교수와 대학원생은 학술헌태계의 고리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대학과 고등교육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우리 전국교수연대회의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퇴행을 저지해야 합니다. 대학의 노동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전면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대학의 교원제도를 정비하고, 학술헌태계를 복원하고, 연구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강고한 연대의 힘으로 대학과 고등교육 정상화의 담론 투쟁을 선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학생이 대학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국가 권력과 교육기득권을 상대로 진심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기겠다고 생각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학 공공성과 고등교육 개혁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왔던 교수연구자 동지들의 마음까지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 싸움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신념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을 찾아 밀고 나아갈 뿐입니다. 그 길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등, 노동존중의 대학을 만들어가기 위해 애쓰시는 교수연구자 동지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비정규교수노조도 더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모두의 건투를 빕니다.

## □ 인사말



노 태 호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노태호입니다.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발제님들과 토론자님들의 헌신과 열정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백년대계로 불리는 교육정책 특히 고등교육에서도 실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대학 재정여력의 양극화, 지역소멸로 인한 복합위기를 맞은 대한민국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고민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시장 논리와 대학과 지역의 파트너십을 명목으로 대학교육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학과 지역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대학 법인의 무능·무책임은 외면한 채,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만든 정책들이 실행된다면 대학과 지역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는커녕 대학과 지역의 위기를 더 가속화시킬 것 같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사학재단의 공공재적 성격과 일부 법인의 교육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들은 재고돼야 합니다. 하다못해, 다른 교육구성원과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학문적 발전과 문화진흥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목표로 하는 건강한 공론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때에 개최되는 선진적 고등교육과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우리 전국교수연대회의 전국순회토론회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일원으로 참여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 토론회가 의미 있는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인사말



김 정 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 백년대계 선진적 고등교육과 대학 공공성 강화』전국 순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상임회장 김정구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 개최를 위해 애쓰신 남중웅 전국교수연대회의 상임대표님, 선재원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회의 상임의장님과 전국교수연대회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화의 원동력이었던 국가 고등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초집중과 대학의 서열화로 인한 지역대학의 대책 없는 몰락은 우리의 미래를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으로 몰고 있고,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생활화 등 4차 산업혁명의 가속은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교육계의 무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교육부의 경쟁과 성장 일변도이며 숙고되지 못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교육정책으로 교수님들은 피로감과 거부감이 누적되어 사기를 잃고 자괴감마저 들게 합니다. 교수는 연구와 교육보다는 프로젝트에 매달리고 대학은 그 본연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교련은 전국교수연대회의와 함께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 본연의 역할을 되살리기 위해 흔들리지 않는 철학을 정립하여 국가 고등교육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분명하고 꾸준한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과 지역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쪼록 이번 토론회가 『고등교육 개혁』과 『지역 백년대계』의 순로를 모색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축하



홍 기 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 갑)

안녕하십니까  
평택 갑 홍기원 의원입니다.

오늘 선진적 고등교육과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견을 나눠주실 교수님과 학생 여러분 그리고 모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옛말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교육은 한 개인의 삶을 넘어 우리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견인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교육은 언제나 그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 간의 지나친 서열 경쟁과 시장논리에 치우친 정책 방향은 교육의 공공적 역할을 약화시키고,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격차’를 만들어 내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듯, 대학의 목적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정책이 단기적인 경제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긴 안목과 호흡으로 미래를 설계해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 확충과 정부지원, 나아가 투명한 대학 운영 체계 등 다각도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간 대학 공공성 강화를 앞장서서 추진해 온 평택대에서 개최됐다는 점에서 더 뜻 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는 논의들이 우리의 고등교육과 대학 공공성을 강화하고, 미래를 위한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지혜와 통찰이 ‘교육 백년대계’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축하



김 문 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김문수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이 아름다운 11월, 「선진적 고등교육과 대학 공공성 강화 토론회」가 개최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전국교수연대회의 상임대표 남중웅 교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오늘 행사를 빛내주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지역 소멸이 당면한 지금, 우리 교육 현장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토론회가 개최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고등교육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대학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2010년 7.5조원에서 2021년 16.3조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 12,225로 OECD 평균(\$ 18,105) 대비 67.5% 수준입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는 대다수 OECD 국가와 달리 고등교육보다 초·중등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기적인 사업비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선진적 고등교육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소개해주신 소중한 정책과 의견들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인 만큼, 지방대학의 새로운 도약과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익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 축하



김 준 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 정)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지역 백년대계 선진적 고등교육과 대학 공공성강화>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진적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전국교수연대회의> 선재원 공동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고등교육과 관련된 여러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마다 ‘지역’이라는 키워드가 강조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학이 지역 사회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대학의 공공성 강화가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교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지역을 중심으로 선진적 고등교육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도 우리 사회의 기둥인 고등교육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국회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축사



김 현 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 병)

안녕하십니까.  
평택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오늘 이곳 “지역 백년대계 선진적 고등교육과 대학공공성 강화” 전국순회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고등교육은 단순히 학문적 지식의 전달을 넘어,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속에서 고등교육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중심의 경쟁 논리가 심화되면서 대학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지역 간 교육 격차가 확대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의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지적, 문화적, 경제적 자양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역 특성과 강점을 기반으로 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러한 해법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과 방향성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한국 고등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학문적 성과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공공의 이익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토론회를 위해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열정과 헌신이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오늘의 논의가 뜻 깊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축하



이 용 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 을)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전국교수연대회의 전국순회토론회 <“지역 백년대계” 선진적 고등교육과 대학 공공성 강화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힘써주신 남중웅 전국교수연대회의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전국교수연대회의 관계자분들과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평택대학교지회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또한 사범대학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교육자들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학문의 전당이자,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며, 지역사회의 문화와 혁신을 이끄는 중심축입니다. 특히 지역대학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자 ‘백년대계’의 기반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은 이러한 대학의 본질적 가치와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규제 완화라는 명목 하에 추진되지만,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역 간 교육 격차 확대뿐만 아니라 학문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국교수연대회의가 시민과 함께 민주적 공론화를 거쳐 공정한 고등교육정책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번 전국순회토론회의 개최가 시의적절합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 또한 국회에서 학문 생태계를 파괴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재검토하고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무쪼록,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나라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축사



정 을 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을호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전국교수연대회의 남중웅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 백년대계” 선진적 고등교육과 대학 공공성 강화> 토론회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대학 교육이라는 역할을 넘어 국가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대학은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지역 경제와 문화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접근 방식은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위협하며 이와 역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파행적 정책에서 벗어나, 고등교육이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열려 있고, 질적 성장을 통해 국가 전체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그 대안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에너지 전환, 디지털 대전환, 국제질서의 재편이라는 급변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등교육 시스템을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의 공공성이 강화되어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세계적인 문화·학술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우리의 고등교육이 직면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전국교수연대회의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지혜가 모여 우리 고등교육의 미래를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축사



강 경 속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강경숙입니다.

역대 정부의 방향부터 어긋난 고등교육 정책으로 인해 대학이 활력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장관의 불장난에 가까운 RISE, 글로컬30 등의 허황된 정책만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교수연대회의 주관 <지역 백년대계 선진적 고등교육과 대학 공공성 강화> 전국 순회 토론회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전국교수연대회의 및 전국 공공성강화 평택대추진연대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고등교육 정책의 대안적 방향을 확인하고 지역 백년대계와 공공성 강화, 대학 공공성 강화와 ESG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과 인구 절벽, 지역소멸의 절박한 위기 속에서 지역 대학의 출구를 모색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활발한 토론을 위해 단기적 아이디어부터 장기적인 방향 모색까지 이뤄졌으면 합니다.

지난해 전국 교수단체가 결성하여 출범한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파괴적 고등교육정책을 규탄하고 제대로 된 고등교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테마로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제1부 좌장 김선일 경희대 교수님,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송주명 집행위원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발제를 맡아주신 정세은 충남대 교수님과 선재원 평택대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제2부 종합토론 좌장을 책임지신 이은우 이사장님과 전문가 패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고등교육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학들의 재정난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처럼 한시적 대안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계속 요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해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윤석열 정권의 파행적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 비판과 대안적 방향  
(글로벌대학30과 RISE를 중심으로)

송주명

(한신대 교수, 전국교수연대회의 집행위원장)

## 1. 2023/24 파행적 고등교육정책의 전면화

### 1. 2022말~23년 대학설립운영규정‘대폭’개정: 규제철폐

- 서울권역 중심의 대학서열화 + 대학공공성의 위기
- 학령인구감소 전제로 한 윤정권의 시장주의‘대학개혁’방향
- 서울 중심 서열체제 강화, 지역대학 위기, 대대적인 사립대학 구조조정

### 2. 지역대학위기에 대한 대응책?: 글로벌30과 RISE

#### (1) 글로벌30

- 지역대학의 글로벌한 ‘경쟁력’프로젝트? 엄격한 구조조정과 특화
- 30개대학(프로젝트), 5년간 1000억지원
- 현재 2년차 20개 대학(프로젝트) 지정

#### (2) RISE

- 지역대발전 지역협력모델, 지역차원 지원거버넌스 문제의식
- 23~24년 ‘시범사업’(7개) →25년 수도권 포함 17개 광역자치체 모두
- 기존 재정지원예산 통합 + 신규예산 등 2조 + @
- 광역시도지사로의 예산 1/2 분배(?)

### 3. 전국적 고등교육 생태계의 교란과 파괴효과: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 2. 고등교육개혁을 어떻게 접근해야 ? 교수연대 고등교육개혁의 7대기조

1. 종합적 국가전략(정책)으로서 고등교육개혁정책
2. 기후위기, 디지털대 전환, 자유주의세계질서 대전환 등역사적 대변동에 대응
3. 대학간 격차와 이해관계 충돌 조정 주요과제의 동시적, 일관된 개혁
4. 수요자 중심의 개혁
5. 대학과 대학 구성원의 창의적 역량 중심
6. 고등교육예산의 의미 있는 확충, 궁극적으로 GDP 1%로
7. 초중등교육과의 탄탄한 연대

## 3. 고등교육개혁의 기본과제 (1) -9개 거점국립대학 혁신과 무상교육화

- 1) 거점국립대 혁신의 척도 정립: 기초학문, 첨단연구, 지역에 맞는 학문 중심
- 2) 연구중심대학의 위상 강화
- 3) 대학원 생활장학금 도입과 확대 및 학위 소지자 진로 확보
- 4) 중소국립대 혁신
- 5) 학부 입학정원 감축 등의 개혁
- 6) 거점국립대 중심의 대학연합체제 구축



### 3. 고등교육개혁의 기본과제 (2) -전문대학혁신과 무상교육확대

- 1) 전문대학의 정체성 확립: '고등직업교육'의 재정립
- 2) 일반대학, 전문대학, 한국폴리텍대학의 위상 조정과 정체성 재정립
- 3) 전문대학의 등록금 경감과 무상교육 확대
- 4) 평생교육/재교육 기관의 역할 강화

### 3. 고등교육개혁의 기본과제 (3) -지방사립대학 혁신 및 네트워크구축

- 1) 지역의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요구에 뿌리내린 특성화된 대학 육성.
- 2) 대학 입학정원은 감축하되 대학과 개별 캠퍼스의 숫자는 최대한 유지하며, 교원 등 교육역량을 최대한 보존하여 지역사회와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강화.
- 3) 라이즈(RISE) 사업의 중단, 새로운 민주적 지역교육협력 모델
- 4) 사립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사학비리 척결.
- 5) 전문대학의 무상교육 확대에 맞먹는 지방 사립대의 등록금 경감을 위한 정부 지원
- 6) 재정이 열악한 중소 규모 대학의 기초교육/교양교육을 국립대 연합체제 혹은 지역의 연구소 체제를 통해 지원.
- 7) 경쟁력 있는 전공을 제외하고 대학원 과정을 축소하거나 폐지.

### 3. 고등교육개혁의 기본과제 (4) -학술정책과 대학원 생태계 혁신

- 1) 인문사회 학술예산의 대폭 증액: 5년 안에 연 1조 달성
- 2) 인문사회연구자의 안전망인 학술연구교수제도의 확대와 안정화
- 3) 기초학문 관련 법률의 제·개정
- 4) 우수한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

### 4. 윤석열 고등교육정책의 평가 (1): 글로컬 30 -사업 1년(2년차)의 현실, 본질적 문제점들

1. 지역대학의 글로벌한 경쟁력 강화 위한 국가전략의 부재: '경쟁' 지상주의
  - 전국적 균형의 부재, 전략적 조화의 부재
  - 정치적 기준 작동 의문: 지역편중, 거점국립대 배제지역도
2. 지나친 구조조정과 특화: 글로벌한 대학의 종합적 학문생태계의 파괴
  - 기초학문 대폭 축소, 첨단/특화학과와 기형적 성장→ 대학의 지속 불가능성
3. 예산의 불분명성 + 사업비예산 뿌리기: 교수충원 등 전략적 대학발전에의 기여 부재
  - 예산의 불확실성: 1년차 평균 41억 지원(Cf. 200억) 예산의 하반기 편중지원(사업진행의 차질 불가피) 등
  - 예산의 소재? 독립 or RISE? 그리고 3년후 예산 지속될 것인가? 현장 구성원 무책임성
4. 개별대학 혹은 소수 통합대학군의 고립된 지원
  - 지역대학 전반의 경쟁력 확충에 대한 확산효과(spill-over effect) 부재
  - 전체 지역발전 전략과의 본질적 연계의 결여
5. 부유 사립지원 편중, 사립대 공공적 발전 저해
  - 가진 사립 '특혜' 몰아주기, 지역 사립대학의 공공적 구조개혁에 대한 확산효과 결여
6. 연합/통합 프로젝트의 합의 미성숙(동상이몽): 전략(비전, 목표, 과정 등) 공통인식 결여

## 4. 윤석열 고등교육정책의 평가(2): RISE -25년 본격시행, ‘착시’속의 우울한 현실

1. 교육부의 예산배분, 대학권한 이양 약속에 급조되는 ‘지역전략’  
-단기적, 단견적 시야의 ‘교육형’지역개발 그림(전국, 지역레벨이 교차되는 거시적-전략적 시야 부재)
2. 대학과 지역간의 상호소통 및 지속발전 모델에 대한 이해 결여  
-대학과 지역 관계설정의 커다란 변경이 요구되지만, 직접적인 산업요구 + 예산 사업 접근  
-매우 실용적이고 대학의 중장기적 발전과 지역발전 간의 다층적 구조 몰이해
3. 한편으로 변화된 재정지원 예산뿌리기 방식일 뿐...  
-종래 예산통합, 지역관련 교육예산의 억지스러운 통합(2조 + @)과 재정지원 배분필요
4. 글로벌 30예산 포함 논란: 2년차 약4000억? 글로벌대의 실질적 광역시도립화?
5. 수도권대 재정지원과 지역대학 지원예산의 위축 가능성
6. 정치적 예산배분, 사립대학의 ‘정치적’구조조정 가능성  
-시도지사의 정치적 예산분배(비시장주의), 정치적 기준의 사립대 구조조정, 혹은 비리 사립과의 정치유착?
7. 거버넌스 취약성과 교육관료의 지배력: 전국 RISE위원회와 지역 위원회  
-광역시도의 경험, 지식 등 부족, 퇴직 교육관료의 재취업, 교육부의 관료적 통제망

## 5. 연대회의의 대안적 방향 (1) : GCUs + RSSE

1. 글로벌 30이 아니라 광역시도별 ‘GCU(글로벌지역대학연합)’들로 대학균형발전  
-비전략적이고 개별적인 글로벌대학이 아니라 광역시도별 핵심적 국립-사립대학 대학연합을 지원  
-Global Confederate Universities(GCUs): 다중심적(多中心的) 대학의 종합적 균형발전  
-사업예산이 아니라 세계적 GCUs개를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적 일반 고등교육예산의 편성
2. 무원칙한 RISE가 아니라 국가전략으로서 ‘RSSE’를  
-국가균형발전 전략 + 지역고등교육 국가전략  
-지역상생 대학지원 생태계(RSSE: Regional Synergic Supporting Ecosystem for Universities)
3. 국가균형발전위 + 국가고등교육위원회의 공동의 국가전략
4. 안정적 고등교육재정의 확보가 긴요  
-다중심적 대학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과 연구의 공공성과 질적 수준을 세계적으로 향상  
-서울권역 주요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에 상당하는 재정을 중장기적으로 지역대학에 우선 배분  
-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의 점진적 확대와 안정화가 필요 (OECD 평균 기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5. 혼란의 ‘Glocal 30 + RISE’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고등교육전략으로서  
‘GCUs + RSSE’가 긴요하다!!

## 5. 연대회의의 대안적 방향 (2): GCUs

### 1. 지역내 핵심대학 6-8개를 '대학연합' 형성토록

- 지역내 대학활동의 허브역할을 하면서 성과확산 및 통합효과, 공공적 구조조정 지원
- 초기에는 대학연합(Confederative U.s)→궁극적으로 연합대학(Federative U.s)
- 광역자치체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교육/연구의 생태조건에 따라 단위는 재구성될 수 있음

### 2. 국립대 중추(3~4개)

- 정원축소(수도권과 비례적 축소)
- 거점국립대(기초+인문+첨단) + 지역국립대(기초+권역 특화, 권역 대학 통합 및 공공적 구조조정 지원)

### 3. 지역사립대(3~4개)

- 정원축소, 전공 유지, 시민교육 기관화, 거버넌스 재구조화, 지역 사립대의 획기적 공공적 구조개혁 전제
- 대학별 특화/경쟁력 강화, 거버넌스 및 재정면에서 공공적 허브역할 사립/전문대 3~4개 포함

### 4. 연합이란?

- 공공적 구조개혁을 전제로, 대학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분업과 통합 노력
- '대학연합운영위원회'로 통합되는 대학연합(GCU)→'연합대학이사회'로 통합되는 연합대학(GFU)으로

### 5. 국가고등교육위원회 정책대상으로서 GCUs →지역내 성과확산

### 6. 국가경쟁력 고등교육투자(국가균형발전 + 고등교육 국가전략): 다중심적 GCUs 형성, 일반재정지원

## 5. 연대회의의 대안적 방향 (3): RSSE

### 1. 국가균형발전위 + 국가고등교육위의 전국적 협조, 조정의 면밀한 지역상생전략 수립

- 단순 경쟁이 아닌 상생협력 방식
- 지역별 산업(화) 특징, 지정/경학적 위상; 지역별 역사 문화자산 구조; 시민사회의 특수성 등 충분히 반영
- 다층적 지역발전 및 시민발전 전략, 중장기적 시야의 지속가능한 산업화 전략
- 지역 + 대학의 다층적 협력구조; 광역/기초 차원의 면밀한 대학지원체제
- 민주적 거버넌스의 확보: 참여주체의 합의제 원칙

### 2. 임무1: GCUs의 지역별 발전 생태계 형성 및 지원

- 국가고등교육위원회 GCUs전략 + 지역차원의 민주적 대학지원 거버넌스
- 지역 사립대의 공공적 구조개혁 지원
- GCUs을 허브로 하는 대학발전 확산구조, 대학간 협력 네트워크

### 3. 임무2: 지역별 GCUs를 핵심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의 형성 및 실천

- 지역 정착 인재, 지역 교육구조의 발전 연계
- 지역 첨단 산업발전의 학문-기술적 핵으로서 대학→지역산업화의 자극, 안정적 일자리 확산
- 지역 시민사회의 역량 질적 업그레이드: 인생2라운드 전공, 평생직업교육,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Glocal30/RISE의 파행을 중단시키고,  
다중심적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GCUs/RSSE로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학 자율성 · 공공성과 고등교육정책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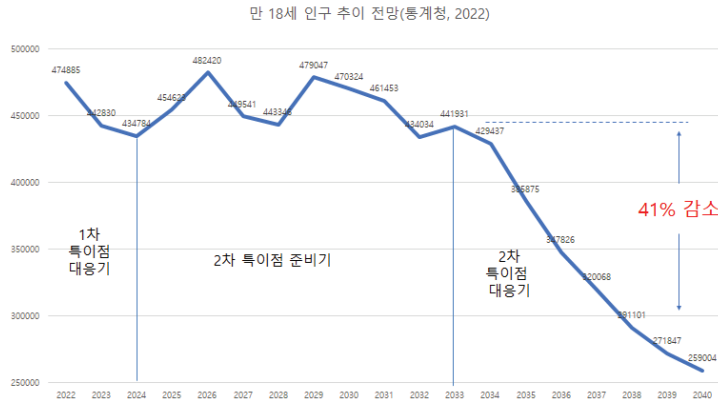
정 세은  
(민교협 공동의장, 충남대)

## 1. 대학의 위기는 신자유주의 고등교육 정책 때문

- 김영삼 정부의 1995년 5월 신자유주의 고등교육 정책 실시
- 대학설립 준칙주의 & 대학정원 자율화
- 한국 대부분 사립대학 지배구조는 대학을 사업체 또는 사유재산으로 인식해 보존과 증식을 목표로 함. 정원 자율화를 사유재산 증식의 기회로 삼았음.
-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 상황, 운동장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경쟁 강화는 심각한 부작용 야기
- 공공성 위기: 서열화, 수도권집중화, 영리화, 대학 교육의 질 하락
- 자율성 위기: 교육부는 예산을 미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부침

## 위기 핑계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추진

윤석열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핑계, 글로벌과 라이즈를 미끼로



### 신자유주의 정책 심화

- 운영규정 완화
- 무전공 확대
- 더욱 규제완화

###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 지역간 불평등한 구조
- 대학들 간 무한경쟁
- 지역대학 위축

## 2. 잘못된 진단에서 출발한 윤정부 대학 개혁

그동안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 국가는 돈을 쏟아부었는데... 실패했다는 프레임

	'03.2.~'08.2.	'08.2.~'13.2.	'13.2.~'17.3.	'17.5.~'22.5
정책 기조	국가 균형 발전 지방대학 육성	시장과 기업 역할 강화 지역 경쟁력 강화 추진	정책 사각지대 회복 지역사회 발전 초점	국가 균형 발전 강화 지자체-대학 협업 강화
주요 정책 사업	①1단계 BK21 육성사업 ②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NURI)사업 ③산학협력대학 육성사업	①2단계 BK21 육성사업 ②수도권 지방대학 교육 역량강화 사업 ③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①BK21+ ②LINC+(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③CK(대학특성화) ④PoINT(국립대학 혁신 지원)	①국립대학 육성사업 ②대학혁신지원사업 ③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정책 성과	지방대학 예산 증액 지역 거점대학 육성	지방대학 경쟁력 기반 확충 대학 자율성 확대	재정지원사업 통합·확대 지방대 육성방안 발표	지역-대학 혁신 플랫폼 지역대학 국가책임 강화

지역대학-지자체가 노  
력을 기울였다.



- **교육부 진단 재검토1: 지역대학의 경쟁력이 낮다? 그런가?**  
**그렇다고 해도 누구 책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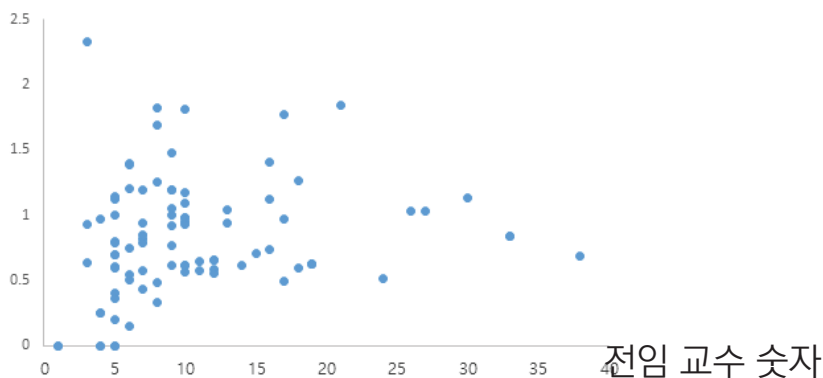
- 교육부는 지역대학의 경쟁력이 낮다고 낙인을 찍고 있다.
- 그 근거는 대학 평가 기관이 제시하는 대학 순위일 것이다.
- 즉 지역대학의 국제적 대학순위가 낮기 때문일 것이다.
- 그런데 지역대학이 대학순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 국가로부터 충분히 지원을 받았는데도 지역 대학의 순위가 낮게 나오는 것인가?

지역대학 약한 경쟁력은 교수들의 저성과?

**수도권과 지역 대학 간 규모 격차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  
규모 격차 극복은 지역 대학이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님.

1인당 논문실적(편수)

**〈참고〉 학과 규모와 연구실적**



자료 : 대학알리미,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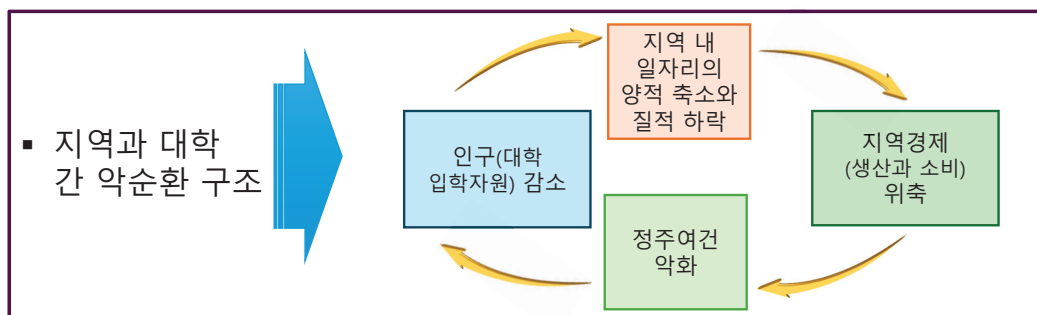
그동안 중앙정부가 지역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지만, 지역대학은 그 돈이 어디로 스쳐갔는지 알 수가 없다. 사업비 관리를 위한 비정규직원 채용에 쓰였지 본질적 역량 강화에 도움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 수도권과 지역대학 격차는 지역대학의 노력 부족이라기보다 지원 격차

- ✓ 충청지역 4개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 숫자 <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숫자
- ✓ 중복성과 영세성. 국립대 4개 학과가 모두 비슷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영세성에서 비롯

공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충청권 국립대	세부 전공	성균관대
√	√		√	3	화폐금융	4
√	√		√	3	노동경제	2
	√	√		2	계량경제	4
	√	√	√	3	국제경제	2
√	√			2	수리/미시	4
√	√		√	3	거시경제	1
√	√		√	3	도시경제	1
	√		√	2	정치경제	3
	√	√		2	산업조직	2
		√		1	재정	2
		√		1	재무	2
		√		1	국제금융	2
			√	1	환경경제	
			√	1	중국경제	
		√		1	지역경제	
			√	1	개발경제	
					보건경제	1
					일반균형	1
					법경제	1
5	9	7	9	30		32

## 대학 자율성과 공공성 위기 야기 & 지역과 지역대학의 동반 침체



서울대, 수도권 대형 사립대 중심의 대학서열화 → 국립대, 지역 밀착 사립대 위축

• **교육부 진단 검토2: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올리려면 지역 특성화 해야 한다?**

- 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으면서 지역대학에 대해서는 왜 그런가?
- 각 지역이 특정 산업에 특화되어 있나?
- 소도시 하나야 그럴 수 있겠지만 광역시, 도 전체가 특정 산업에 특화되어 있나?
- 지역대학은 교수 숫자가 부족해서 기본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특화하는가?
- 지역대학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그 지역에서만 일해야 하는가?
- 지역대학에 대해 지역 특성화 산업에 특성화하라고 한다면 제조업이 발전한 특정 지역 대학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 **교육부 진단 재검토3: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해야 한다?**

- 원론적인 이야기이다.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려면 여건을 먼저 마련해 주어야.
- 초중등교육은 지역교육청 세워서 예산과 조직, 인력을 제공하고 있는데,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이를 제공하지 않고서 지자체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
- 충분한 예산, 조직, 인력을 제공해야 하겠지만, 초중등교육과 다른 고등교육 전문가, 그것도 지역 산업까지 잘 아는 전문가를 지자체가 찾아서 지역대학 책임지는 일이 쉽지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 지역 경제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역 대학을 책임진다면 지역 대학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큰 수도권 대학들이 더욱 유리하다.
- 지자체에게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논리로 대학교육을 지자체에 맡긴다면 과연 지역대학과 지역경제에 긍정적 결과가 발생할까? 고등교육 정책은 중앙에서 지역 상관없이 책임지되 지자체와 협력해야 할 부분에서는 협력을 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할 것이다.

### 3. 바람직한 구조개혁 방안은?

#### 기존 대학개혁안 검토

- 1) **국립대 네트워크**: 2000년대 초 정진상 교수의 선구적 제안.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안에서 국공립대 연합체제 구축에 관한 다양한 방안. 이는 역대 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내놓은 단골 공약.
- 2) **공영형 사립대**: 한국 대학의 80% 이상이 사학이라는 특수성에 주목하여 사립대학을 정부책임형 내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학 비리를 척결하여 대학 생태계를 살리는 방안.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었지만 실행되지 못함.
- 3) **포용적 상향평준화**: 교육 평론가 이범의 안으로서 서울대를 포함한 거점국립대와 서울의 상위권 사립대 등 30개 대학 정도를 묶어 파격적인 대학별 지원(참여대학 교수 1인당 연구비 연 1억)을 대가로 학생 선발권을 넘겨받아 공동선발제도를 시행하여 대학 발전과 입시지옥 완화를 달성하는 방안.
- 4) **서울대 10개 만들기**: 김종영 교수의 방안으로서, 9개 거점국립대들에 대해 적절한 구조조정을 전제로 서울대 수준의 파격적인 정부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전국 각지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10개 만드는 방안. 이 사업에 서울대가 참여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이 공약으로 채택했음.
- 5) **서울대를 뺀 국립대학 네트워크**: 김종엽 교수의 안으로 서울대가 법인화하여 이미 국립대학 체제에서 이탈한 상황에서 서울대를 포함한 공동 선발제 등 국립대 네트워크 추진은 사회 기득권층의 저항이 심해 현실성이 없다고 봄. 나머지 9개 거점국립대에 집중 투자를 하되 세종시를 국립대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 6)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혹은 권역별 연합대학** 방안: 반상진, 임재홍 교수 등의 최근 방안. 국립대 네트워크나 공영형 사립대 방안 등이 지지부진한 현실에서 각 지역별로 대학들이 다양한 수준에서 연합대학을 형성함으로써 무원칙한 대학 통·폐합을 극복하고 대학 생태계를 혁신하는 안. 앞으로 더 구체화되어야 할 방안.
- 7) **지역별 비례선발제**: 2024년 8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방안(「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이 시행 중인 지역균형선발제도를 확대. “일부 상위권대가 자발적으로 대부분의 입학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선발하되, 선발기준과 전형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

- 지역별 비례선발제: 현재의 구조적 문제들에 의문 제기하지 않음.
- 해결책으로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어려움.

-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별 비례선발제보다 낮지만 소수의 지역대학에게 유리.
- 대학간 경쟁을 부추기며 예산을 몰아주는 것.
- 그러면 나머지 대학은? **현재 글로컬 30과 비슷**

현재 구조  
유지 대안

- 국립대 네트워크, 포용적 상향 평준화: 국립대를 중심으로 하는 평준화.
-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는 낮지만 사립대는?

## • 공유성장형 연합대학체제 & 공영형 사립대

## • & 대학별 역할분담: 바람직한 대안. 신자유주의적 경쟁 정책 폐기

### 대학별 역할 분담이란?

###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일반대학의 관계 재정립 필요

- 전문대학과 4년제 일반대학의 구분을 없애고 지방사립대의 구조개혁 작업을 전문대와 함께 하여 고등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일도 진지하게 검토할만함. 사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구별은 이미 붕괴.
- 차제에 일반대와 전문대를 위계질서로 바라보는 기성의 틀을 타파하면서 지방의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상생할 방안을 찾아야 함. 경쟁력을 상실한 지역의 일반대들이 과감하게 ‘고등직업교육’의 틀 아래에서 자체혁신 도모가 유력한 방안.
- 이 과정에서 ‘고등직업교육’의 개념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동시에 산업정책, 인력수급정책 등의 관점에서 특정 전공의 교육과정이 2년/3년/4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평가하여 지역의 전문대학/폴리텍대가 수행할 고등직업교육을 현실에 맞게 재편할 필요.
- 특히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특성상 재교육기관·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해야 함.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폴리텍대학까지 포괄하는 ‘고등직업교육’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절실.

## 대학 무상교육 추진 필요

- 지식기반 경제의 고도화 과정에서는 우수한 인력이 더욱 필요하여 고등교육이 점점 더 중요해짐. 그러나 우리 대학은 고급인력 양성에서 실패하고 있음. 이것은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국가정책, 사회정책의 문제.
- 대학 무상교육을 확대하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우수한 젊은이가 좋은 대학을 택할 수 있어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음. (한국은행의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노리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기술교육, 고등직업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세계적 규범.**
- 대학 무상교육은 **재교육과 평생교육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다양한 세대의 자기실현과 행복 추구에 기여.**
- 물론 대학 무상교육이 확대되면 잠재수요, 가수요가 현실화되는 거품 발생이 예상됨. 그러나 이는 엄정한 학사관리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음.

## 학사운영단위 확대 등 혁신도 필요

- 현 정부의 교육부가 강요하고 있는 무전공/무학과 입학제의 단순한 반대는 비현실적.
- 1) 이미 많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서 무전공 선발제를 확대해왔으며, 그외에도 복수전공 의무화, 다전공제도 확대 등을 통해 사실상 무전공 선발제를 확대 중.
- 2)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2012년 대선 국면에서 진보개혁진영도 국립교양대학설치안이라는 비슷한 아이디어를 낸 바 있음. (툭다운 방식의 국가주의적 개혁안이라는 한계가 뚜렷했음.)
- 3) 공급자 아닌 수요자 위주의 개혁이라는 기조를 지키는 것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필요.
- **기본 방향: 학과/학부라는 기본적인 학사운영 단위의 규모 키우기.**
- 소속 교원의 숫자를 늘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의 선택권 넓히고 교원들 간의 협력을 통해 더 다양하고 나은 연구, 여러 전공이 협업하는 융복합연구를 할 여력을 확보해야 함

## 4. 바람직한 구조조정 방식

- 첫째. 초중등학교와 비슷한 대응 필요
- : 대학(혹은 대학 캠퍼스)는 유지하며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 규모를 줄여야 함.
-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대학은 살려야 함
- 
- 서울이든 지방이든 입학정원 2,3천명이 넘는 대규모 대학들의 입학정원을 줄이되
- 가급적 대학의 숫자를 유지하는 것이 지역 사회와 지역 경제의 유지 발전에 유리함.
- 폐교해야 할 경우도 인접 대학에 통합하여 캠퍼스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해당 캠퍼스를 살리거나 용도 변경할 방안을 모색하거나 시간을 두고 제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 올바른 길.
- 입학정원이 1천명 안팎으로 줄어든 대학을 ‘강소대학’으로 만드는 과제.

### 둘째. 석사/박사를 배출 기능은 강화되어야 함(지역대학)

Q: 대한민국은 대학원도 거품이 심하지 않은가? 부실한 석사/박사를 양산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음. 일부 부실한 대학원 운영 문제가 심각하지만, 석사 박사가 부족함.

한국 25-34세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2019년 기준 69.8%. OECD 국가 중 2위. OECD 평균은 45.0%.  
그러나 핵심 연구인력인 석·박사급 이수율은 3%에 불과하여 조사대상 44개국 중 33위.  
(OECD 평균 15%. 스페인 17%, 이탈리아 16%, 독일 15%, 영국 15%, 미국 12%, 호주 10% 등.)

석·박사 고급인력의 양성이 원활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큰 장애 발생이 예상됨.  
실제로 이미 많은 대학의 실험실이 대학원생을 구하지 못하는 현실.  
문제는 박사를 한 이후 취직할 대학과 연구소가 부족하다는 것임. 교수 충원 확대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 「청년층의 교육 이수 현황과 시사점」, NARS 지표로 보는 이슈, 제163호, 2020.12.21. (OECD의 *Education at a Glance 2020*에 근거한 통계 조사 결과)

## 셋째. 평생교육연구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되어야 함

-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과거보다 오래 일하고 계속해서 공부해야 하는 시대.
-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학진학을 즉,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곧장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다른 국가들보다 매우 높음. 따라서 대학 신입생의 거의 전부가 그해의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이루어짐. 문제는 직업 전환이나 숙련 향상을 위해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은 희소함.
- 우리와 달리 유럽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대학에 가는 사람들이 많음. 가령 **2015년 기준 스위스 청소년이 25살 이전에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은 47%이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대학교육을 받을 가능성은 71%임.**(김현경, 「대학 진학률과 ‘스위스 패러독스’», 〈한겨레신문〉, 2018년 10월 31일자.)



대학이 새로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대학이 할 일이 많아짐. 문을 닫지 말고 변화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현재 발의된 ‘사학구조개선법’ 통과 저지 필요

- 법률 제정의 절실함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 **현재의 법률안은 법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내용**을 지니고 있다. 주요 문제점만 지적하면,
- 1) 과거에 발의된 법안들에 비해 사립대의 통폐합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문제의식이 없다. 따라서 무원칙한 대학 폐교와 법인 해산이 이뤄질 위험성이 큼. 말을 바꾸자면, 매각 가치가 높은 ‘노른자위’ 토지와 건물을 가진 대학 법인들이 서둘러 해산할 가능성마저 존재.
- 2) 실제 이 법에 따라 사립대 통폐합을 활성화해도 대학입학정원 감축 효과는 제한적:
- 2040년의 만 18세 장래인구추계가 25만 9,004명에 불과하며, 내년 2025년 대학 입학정원이 34만 934명. 대학 진학률을 70%로 잡은 단순계산으로도 15년 후에는 현재 입학정원의 47% 이상, 즉 거의 절반인 16~17만명을 줄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
- ‘사학구조개선법’에 따라 입학정원 2,000명의 대학 40개를 없앤다고 가정하더라도(사실상 불가능한 가정!) 줄어드는 입학정원은 불과 8만명. 나머지 8~9만명을 줄이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즉, 지금은 서울/수도권/지방, 국공립대/사립대가 골고루 입학정원을 30~40% 정도 대폭 줄이는 대개혁이 필요.



3) 해산장려금 도입은 심각한 문제 야기

한계 사학을 폐교나 해산 허용을 통해 정리하려는 것은 하수. ‘사학 소유주’들은 그렇게 만만한 집단이 아니며, 이들은 사학구조개선법을 악용하여 최후까지 버틸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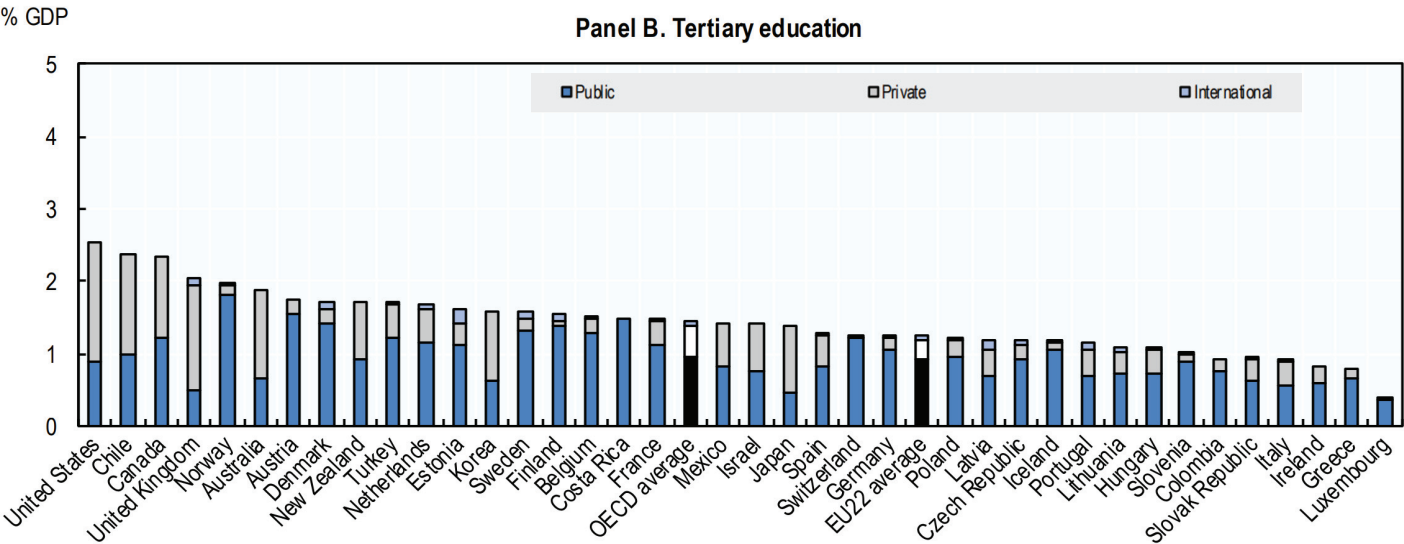
당장 사학구조개선법률안의 부칙 제2조(유효기간)은 10년의 효력을 정하고 있지만, 이대로 통과시킬 경우에 사학법인이 폐교 또는 해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교직원 보수 삭감이나 일방적 구조조정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다가 결국에는 해산하지 않는 상황도 나올 수 있음. 실제 이런 식의 ‘위협’은 지금 다수의 지방대학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임.

따라서 법 자체는 10년 기간 동안 운영하더라도, 특정 대학 구조조정은 3년 정도만 효력을 가지도록 변경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이 법 통과에 앞서 한계 사학들을 대상으로 해산 의사 여부를 정확히 실태조사할 필요가 절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비공식적 조사 결과로는 과도한 수준의 해산장려금 보장 없이는 해산 의사가 없는 사학이 대부분이었다고 함.)

결론적으로,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대학들 간의 통합의 길을 여는 등, 대학 입학정원은 과감하게 축소해야 하지만 폐교의 숫자는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 불필요한 캠퍼스도 시간을 충분히 들여 매각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것이 필요. 대학은 폐교를 결정하는 순간 자산가치가 하락하여 매각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이미 경험으로 입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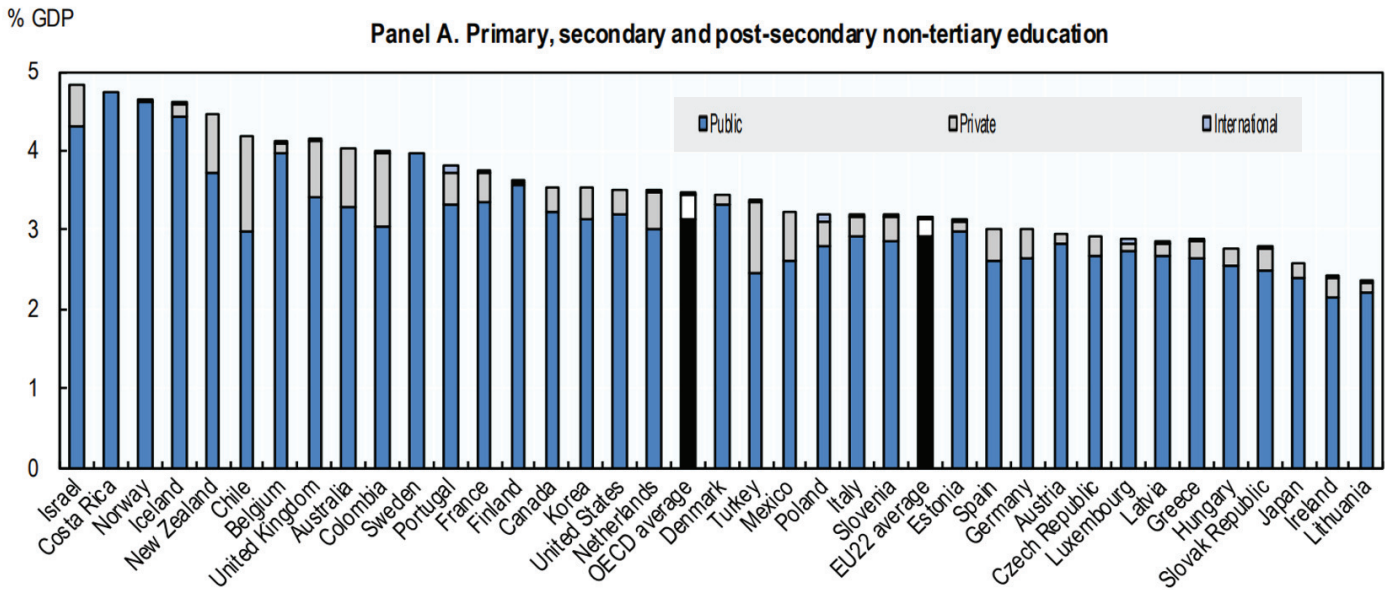
5. 이를 뒷받침할, 고등교육 정부재원 투입 GDP 1% 확보

고등교육 전체 지출규모 OECD평균과 비슷  
문제는 재원 부분. 공공재원 투입이 평균에 이르지 않음. 공공재원에 크게 의존하는 국립대 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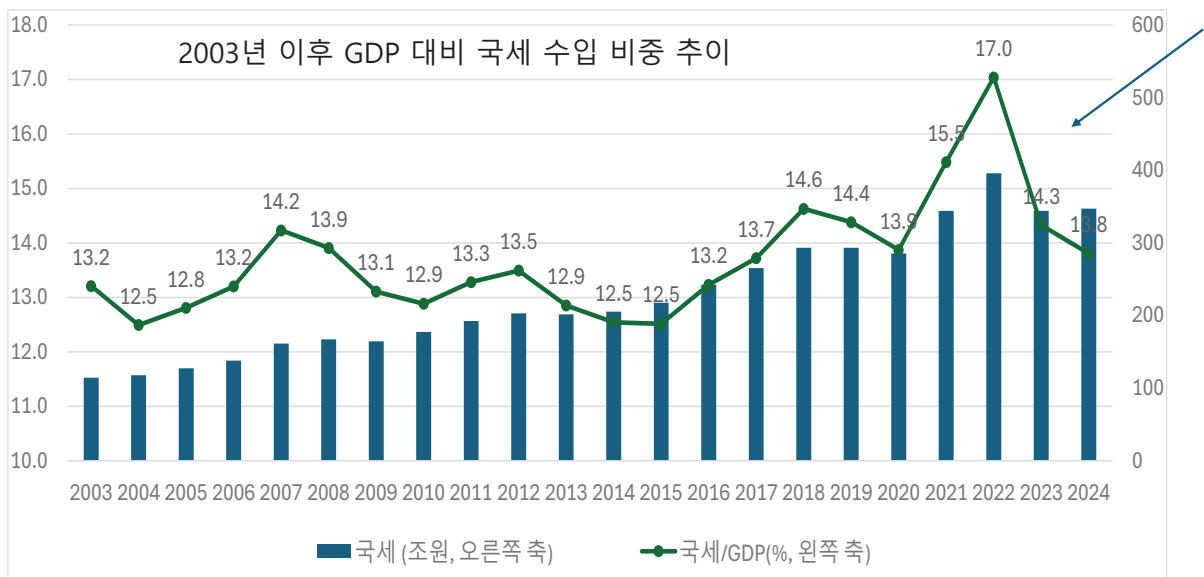
Q: 학령인구 급감으로 여유가 생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재정으로 돌리면 충분하지 않은가? NO. 초·중·등 교육은 OECD 평균과 비슷

2018년 자료



## 대학개혁 운동이 증세운동을 포함해야 하는 이유

이건 그냥 감세라고 생각하면 안됨. 국립대가 쓸 수 있는 돈을 상실.



# “ '지역 백년대계'와 대학 공공성 강화”

-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

2024.11.22.(금)

**선재원**

(전국교수연대회의 공동대표/ 평택대 교수)

평택대 구성원, 시민, 전국교수단체로 구성된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는  
공공성을 확대하여 실력과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양성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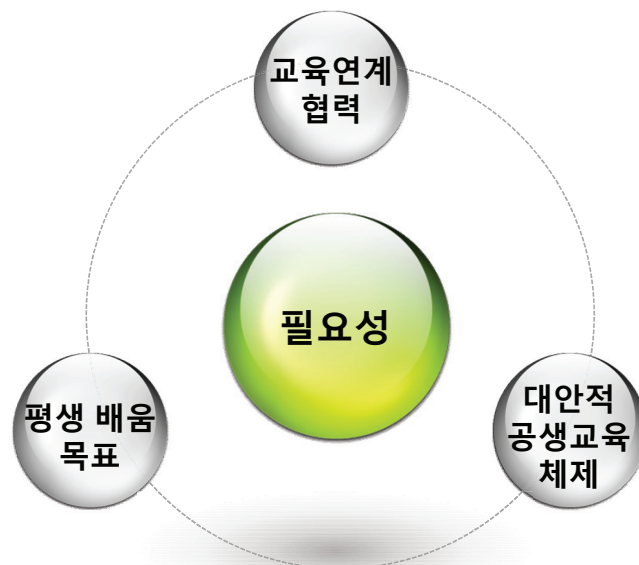


#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 반상진, '한국 대학체제의 새 판짜기'(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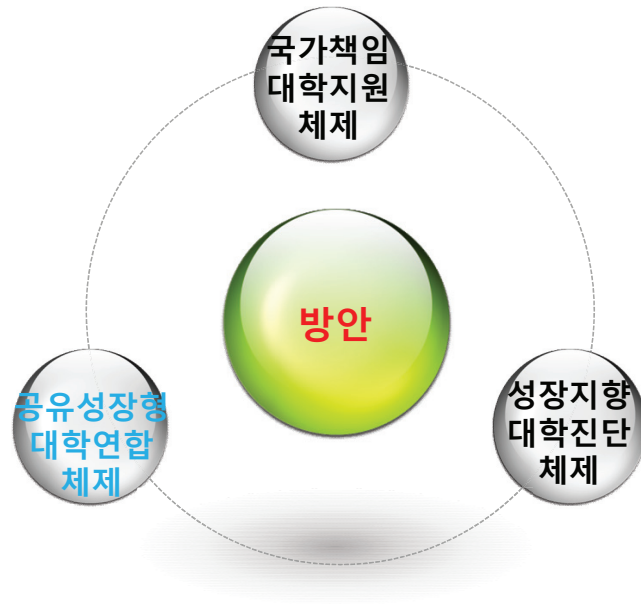
## 1. 교육 대전환

### 필요성



## 2. 기본 구조

### 방안



경기남부(평택/안성)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방안

## 1.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의 필요성

### 필요성

- 경기남부지역 대학(평택대, 국립한경대, 국제대) 간 연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3개 대학 구성원들(학생, 교수, 직원)이 상호 이해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가 필요함
- 우선 고등교육법상 추진할 수 있는 대학간 협력 활동인  
'① 교육과정 공유활동 ② 대학 인프라 공유 ③ 교수 자원 공유'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러한 활동의 성과를 토대로 '3개 대학 연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 대학연합체제 추진전략

### 추진전략

1단계	2단계	3단계
점진적인 연합	단계적인 연합	참여에 기반한 대학 연합
3개 대학 간 교육 협력과 연계활동 활성화 필요	3개 대학 관계자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단계적 통합(안)' 마련 필요	다양한 학내, 외의 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토대하여 대학 통합 추진 필요

## 2. 대학연합체제 추진전략

### 점진적 연합

- 규모의 경제화: 소규모  $\Rightarrow$  중규모
- 입학정원(2024년도) 기준 비교

경기남부(평택/안성) 공유성장형 대학연합	인천국립대법인
2,646명	2,51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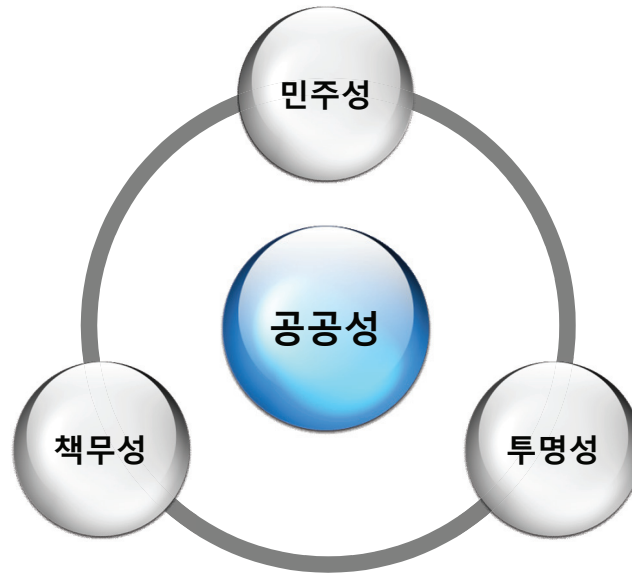
\* 평택대(805명), 한경국립대(1,271명)

\*\* 국제대[전문대](1,139명=> $\frac{1}{2}$ =570명)

## 사립대 '공공성 강화' 추진과 현실

- '경영권'의 '소유권'화 현실 -

## 1. 대학 공공성 강화 목표



## 2. 공공성 강화 추진과 현실



### 1. 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재정 관련 비리 방지 및 대학 재정의 건전성 확보
- 제도의 '형해화'

### 2.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정규과목 운영, 지역사회와 인권활동 연대
-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정규과목 운영 중단, 지역사회와 인권활동 단절

### 3. 법인 임원과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교육부 추진 사항
- 분기별로 법인 임원과 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2. 공공성 강화 추진과 현실



### 4. 법인 임원 간 친족 관계 공시

- 교육부 추진 사항
- 법인 임원 간 친족 관계(민법 제777조) 공개

### 5. 이사회 회의록 무기한 공개

-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무기한으로 변경
- 정이사체제 전환 이후 2년 미만 공개

### 6. 이사회 참관 제도

- 교수, 직원, 학생, 평택 시민 6명이 회의 참관 가능
- 참관 불가능

## 2. 공공성 강화 추진과 현실



### 7. 법인 임원 친족 교직원 수 공시

- 교육부 추진 사항
- 법인 임원과 친족 관계의 교직원 수 공개

### 8. 직원 채용의 공정성 강화

- 인사위원의 과반수를 외부 위원으로 구성
- 시행하지 않음

### 9. 대학평의원회 참관제도

- 교수, 직원, 학생, 평택 시민 8명이 회의 참관 가능
- 참관 불가능

## 2. 공공성 강화 추진과 현실



### 10. 재정위원회 참관 제도

- 교수, 직원, 학생, 평택 시민 8명이 회의 참관 가능
- 참관 불가능

### 11. 회계부정 임원 승인 취소기준 강화

- 교육부 추진 사항
- 1천만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은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 12. 비리 임원, 총장, 교무위원, 대학평의원, 복귀제한 및 당연퇴임 근거마련

- 교육부 추진사항
- 교육공무원법 수준 이상 기준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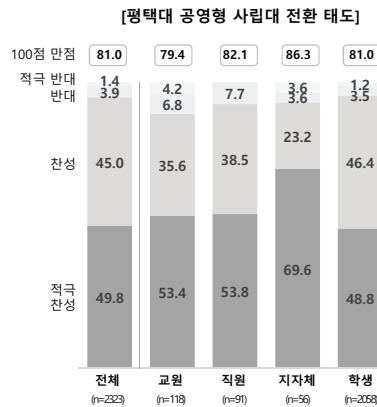
'공공성 강화'된 대학에 거는 기대

## '공공성 강화'된 대학에 거는 기대

### 공공성 강화된 대학에 거는 기대

Q. 평택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년)

[N=2323, %, 점]



- 평택대 공영형 사립대 전환 찬성률, 약 90%로 매우 높은 수준임.
- 재학생의 찬성률이 95.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자체(92.8%) > 직원(92.3%) > 교원(89.0%) 순으로 나타남.

\*4점 척도

평택대 구성원, 시민, 전국교수단체로 구성된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는 공공성을 확대하여 실력과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양성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토론

### ESG경영 관점에서 바라본 대학의 공공성 강화 시사점

공 성 경

K-ESG평가원 전문위원 겸 평택지부장

#### 1. ESG경영과 대학의 공공성

- 대학의 사회적 책임성 및 지배구조에 순기능적 기능
- 대학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
- ESG 친화적 인재 배출을 통한 사회 전반의 공공성 강화

#### 2. 지역교육 대계와 ESG경영의 연계

- 지역교육 대계를 위한 제 기관 협의체 구성의 기본 원리
- 지역의 초·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의 공통 목표 및 지향점
- 지역 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평생교육 기관을 통한 시민교육

#### 3. 평택대학교의 ESG경영 현황과 공공성 강화 과제

##### 1) 환경(Environmental)

- 대학의 환경목표와 세부 추진 계획 수립
- 청정 재생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
- 친환경 건물 운영 및 유지관리
- 친환경 인증 제품구매
- 폐기물 배출 및 유해 폐기물관리

##### 2) 사회적책임(Social)

- 사회적 책임 경영 목표 수립 및 공시
- 공정한 채용 및 정규직 비율

## □ 토론

### 평택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언

김 기 홍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 겸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소장

1. 지역 내 초중등 교육 협력
  - 지역 고등학교와의 학점 교류
  - 토론대회, 미술대회, 문예 백일장 등 개최(수상자 대학 진학 시 가점 부여, 정원 외 특별 전형 등)
  - 교육대학원 신설
  - 지역 고등학교 출신 선발 강화
2.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강화
  - 산업체 노동자 특별 전형 및 편입학 확대
3. 인권센터 강화
  - 대학생 노동인권교육(학점뿐만 아니라 졸업 인증제 운영)
  - 노동대학(지역 내 노동자와 대학생 예비 노동자 대상)
  - 노동영화제(지역 내 노동단체, 노동조합 등과 협업)
  - 전담할 수 있는 정규직 직원 채용
  - 인권센터 독립성 강화를 위한 외부 인사 채용
4. 평택학 역사 연구소 운영
  - 평택의 역사를 연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지식 연구소 운영
5. 공동체 구성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장학금 강화 -->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주적 훈련
  - 지역 사회 공헌 활동(시민사회단체 활동 참여 보고서 제출, 농활, 자원 봉사 등) 졸업 인증 또는 학점 부여
  - 총장 직선제 시행
  - 경비 및 청소 용역 노동자 직고용, 상시 지속 업무 중인 계약직 노동자 정규직화 추진
6. 평택대-국립한경대-국제대 연합대학
  - 학점 교류, 지역을 매개로 한 공동 토론회, 학술제 등 개최
  - 연합 동아리 등 학생 간 교류 확대

## 장기적 고등교육정책과 공영형 대학

박 철 웅

민교협 공동의장 겸 목원대 교수

전체적으로 송주명교수의 발제는 현 정부 교육정책 문제점의 핵심을 꿰뚫고 교육과 지역의 생태계를 중시한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정세은 교수는 교육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비판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부분이 빛났다. 무엇보다 두 명 발제자의 의견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정책실현을 위한 자원부분이다. 송교수는 현재의 교육개혁정책은 재정마련부분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의지 없음을, 정교수는 더 나아가 증세 없이는 정책 실현이 불가능함을 지적한다. 물론 그동안 정교수의 발언으로 판단할 때, 여기서 증세란 이른바 ‘부자감세의 철폐’를 통해서이다.

두 발제자 모두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4년제 대학중심의 미시적 관점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고 전문대, 더 나아가 초중등교육 그리고 지역의 일자리까지 포함한 거시적이고 입체적인 사고를 주문하고 있다. 송교수는 특히 종합적 국가전략(정책)으로서 고등교육개혁을 삼고 초중등교육과의 탄탄한 연대할 것을 주문한다. 거점국립대중심의 대학연합체제를 구축하고 그 척도정립으로써 기초학문, 첨단연구, 지역에 맞는 학문을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으로써의 재정립을 강조한다. 교육부의 지자체에 예산분배에 대해서는 급조된 전략으로 정치적 예산분배, 사립대학의 정치적 구조조정 가능성을 경고한다. 또한 현정부의 고등교육지휘권한 지자체 이전이 실행되면 라이스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퇴직 교육관리의 재취업의 장이 되기 쉽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송교수는 최종적으로 대안으로 광역시도별(GCU)지역상생 대학지원 생태계(RSSE)를 주장한다. 정교수는 김영삼정권 이후 역대정부가 위기를 핑계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특히 윤석열정부는 학령인구감소를 핑계로 글로벌과 라이즈를 통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송교수와 마찬가지로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한 역할분배가 필요하며 대학은 유지하되 입학정원은 줄이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송교수가 지역 사립대의 석사 과정을 없애는 방향의 역할분담을 제시한 반면 정교수는 OECD기준으로 석박사비율이 부족한 점을 들어서 오히려 정원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며, 직업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대학개혁운동에 자원마련을 위한 증세운동을 제안한다.

두 발제자의 주장을 접하며 가장 먼저든 생각은 ‘이러한 변화가 우리사회의 직업 간의 임금격차와 경제적 선순환이 가능한 완전한 지방분권화 없이 가능할까?’이다. 모두가 지지하는 바, 오늘날 대한민국 초중등교육의 목표는 소위 일류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이다.

일류대학에 들어가면 전문직과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주어지고, 일생의 경제적 안정이 보장된다. 반면에 대학을 못가거나 전문대, 지방대학을 나오면 거기서 중하류층로 삶의 진로가 결정 난다. 선진 OECD국가 중에서도 미국과 더불어서 압도적인 임금격차를 가진 우리사회의 구조적모순을 허물 지 않으면 수도권일류대 쏠림현상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지방대를 나와서도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릴 찾을 수 있어야한다. 중앙과 지역의 수직서열화는 단지 대학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기준이 여기에 준한다. 그런 상태에서 지역대학이 홀로 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양질의 일자리가 가능하기 위해선 독일과 같은 완전한 경제적토대가 가능한 확실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한다. 여기서 지역에 필요한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인력을 배당하고 지역공동체의 공통적인 고민과 노력 속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한다.

개별적인 질문을 하자면 정교수는 또한 지역의 4년제 대학이 비슷한 학과 설치로 전문대와 유사해져가고 있음을 근거로 통합하는 방향을 주장하는데, 이는 대학은 유지하되 입학정원을 유지하자는 본인의 주장과 대치되며 결론적으로 사립대와 전문대에 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또한 이는 한편에서 제기하는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먼저’와 함께 사립대학의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의 사립대학의 대부분은 이러한 변화에 당장 버틸 수 있는 힘조차 없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지역의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각자도생의 길 보다는 완전한 상생의 모델을 함께 추구해야한다는 생각이다.

선재원 교수의 발제는 ‘경기남부연합 공영형대학’이라는 선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대학인프라, 교수자원의 공유를 점진적으로 이루어갈 것을 주장하고 민주성, 책무성, 투명성을 근간으로 공공성을 이루는 목표를 제시한다. 특별히 재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으로 재정관련 비리방지 및 대학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적인 대학재정 운영 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 효용성 있게 다가온다.

이러한 구체적인 모델제시가 결국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훌륭하다. 그런데 이를 위한 개혁의 방법으로 제시한 여러 가지 민주적인 공개와 감시 절차만으로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앞서 송교수가 주장한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등교육개혁 정책이 입안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현재 진행되는 ‘사학구조 개선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고 시행령 철회로 ‘부정한 이사’들도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등 민주적이고 공영적인 지배구조 전환이 선결되어야만 한다. 또한 특별히 한국의 많은 사학재단들이 오랫동안 기득권의 전유물로 행사되어져, 여당야당 할 것 없이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뿌리 깊은 관계를 맺어 온 만큼 장외에서도 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 학부모단체 등 교육단체들과 연대투쟁을 동시에 수행해야한다.



## □ 토론

### 교육 개혁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방분권

송 치 용

사회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우리 평택 지역과 교육의 상생과 발전에 관심이 많은 한 시민으로서 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 문제를 고민하는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교육 문제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얹혀 있어서 교육구성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사이고 또한 걱정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출세를 위해선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오랜 유교적 전통에 따라 자녀 교육열이 남다릅니다. 이런 긍정적 측면이 있어서 근대화와 함께 급속하게 학교 교육이 성장 했지만, 개인적 출세와 안정적 일자리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면서 교육의 질은 노력에 비해 결과는 저조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면서 전국에 수많은 대학이 설립되었지만 극심한 경쟁 속으로 내몰려진 대한민국은 초 저출생 국가가 되면서 대학 진학률이 아무리 높아도 대학 정원을 채울 수 없는 강제적 구조조정의 처지로 내몰려졌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이 도래했지만, 아직도 신자유주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부는 안일한 정책으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을 하지 못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교육 정상화를 이룰 기회를 놓치고 지방 대학과 지역 교육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이 무너지면 지역 공동체는 더 위험에 빠져버립니다. 가뜰이나 지방소멸 문제와 지역 공동화 문제가 심각한데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자치는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 문제는 지역 문제와도 민주주의 문제와도 떨어뜨릴 수 없는 우리 시민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의 근본 문제는 서열을 만들고 그 서열에 따라 계급을 나누고 차별을 하면서 온 국민을 극심한 경쟁 속으로 몰아넣는데, 교육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목표가 다른 사람을 밟고 이겨서 일등이 되고 상위권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사람이 민주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그 과정은 연대와 상생을 배우는 과정이어야 하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문명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직업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이러한 교육은 평생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기술 발전이 급속히 이뤄지고 정년은 빨라지며 인간의 수명은 길어지는 시기에는 평생교육이 더욱 중요합니다. 초중등 학교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배움 그 자체가 즐거워 창의성을 키워주는 살아있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전문대학은 사회에 나가 자기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살기 위한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적성에 맞는 교육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는 곳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충분히 지원해줘야 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 함께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새로운

기술과 이론을 업데이트 하는 평생교육이 지방과 지역대학에서 더욱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육이야말로 명과 실이 상부해야 합니다. 말 따로 현실 따로인 채 겉만 번지르르한 미사여구로 포장해서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요원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요즘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컬처가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훌륭해서입니까? 비뚤어진 공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난 인재들이 각자의 창의성을 스스로 발휘해서 개인기로 그 결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뛰어난 DNA를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조금만 더 교육이 제 역할을 해주면 헬조선이 아니라 행복한 대한민국이 가능합니다. 교육 개혁이 그 출발점입니다.

교육 개혁 그동안 쌓인 적폐가 너무도 많아 단기적으로 해결하기가 불가능해보일 정도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근본적인 교육 개혁의 목표를 모든 구성원과 국민이 합의해서 장기적 비전을 세우면서도 당장 해결할 단기 과제도 철저히 준비해서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교육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사학비리 문제는 너무도 시급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학교를 돈 버는 욕망의 도구로 여기거나 자신의 사회적 체면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는 설립자나 그 부역자들은 교육 현장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합니다. 학교는 구성원 간 충분히 소통하며 공동의 목표를 합의하면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학교가 그 구성원들만의 것으로만 머문다면 성장과 발전이 어렵고 자칫 고립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가 되어야 지속 가능한 학교가 가능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하는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제도나 행정 시스템에서는 어려운 일이나 힘있게 뚜렷하게 그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하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도 같이 이뤄내야만 합니다.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독립을 해야 하고 초중등 교육은 교육청의 획일적 행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고 능력있는 정부를 만들어야 하고, 완전한 자치분권이 이루어져 지방 자치단체가 교육예산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유럽 교육 선진국처럼 학교 교장도 주민들이 선출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 기업과 지역 대학이 상생하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학교는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자율성과 연대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주민들은 언제든지 대학에서 재교육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대학은 언제나 새로운 기술과 이론을 전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북유럽 교육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부 당국자들과 의원들 그리고 교사들도 수없이 방문해서 보고 왔습니다만 알맹이는 빼고 겉만 보고 와서 자기들 유리한 것만 훔쳐내 왔습니다. 우리는 껍데기는 버리고 알맹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사회의 주인은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주인인 우리가 주인 정신을 갖고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 누가 제대로 하는지 가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참여 해야만 교육 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주의도 이루어지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 □ 토론

### 대학의 역할,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정 찬

평택대학교 학생

옛 말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는 1년의 계획이 필요하고, 나무를 심는 데는 10년의 계획이 필요하며 사람을 키우는 데는 100년의 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육은 100년을 좌우할 큰 일로, 그에 맞게 길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은 지식인들의 집합소”였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개념에 대한 연구와 노동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은 어떠합니까. 과열화된 입시경쟁으로 인한 ‘의대쏠림현상’, 사람이 아니라 돈버는 기계를 양성하는 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이를 맞장구 쳐주듯 학생들을 사람으로 키우려는 게 아닌 학생들을 취업시키고, 창업시키려는 교육이 주된 중심이 되었습니다.

대학의 역할,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중, 고등학교의 경험이 대학생들의 관심과 활동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중, 고등학교에서 학급회장이나 학생회장이 되어서 변화를 이끌어본 경험이 없으니, 대학생이 되어서 대학과 지역사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택대학교 학생들의 경우엔 그러한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몇몇 학과 학생회장들의 학과 운영에 대한 미숙이 단과대학 학생회 설치에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학생들은 이에 피로를 느끼며 총학생회장 선거의 무산으로까지 이어집니다.

#### -배움의 터, 학문의 터, 삶의 터

항상 교육정책에서 학생들은 뒷전이었습니다. 학교의 의사결정, 정책결정 과정엔 학생들의 의견이 30% 이상 의견조사와 의견이 반영되게끔 운영체계를 바꿔야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학평의원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현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은 교원 6명, 직원 3명, 학생 1명, 조교 1명, 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총 13명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학생 1명은 학생을 대표하는 총학생회장이 맡게 되지만 1명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학생회장이 학생을 대표하긴 하나, 혼자서 평의원회에 의견을 내고 의사를 반영시키기엔 부족함이 존재합니다. 제 생각으로 학생 평의원이 2명 내지 3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대표 몫의 평의원 선거를 치루거나, 전체 학생대

표자회의에서 추천을 하는 방식의 평의원의 학생대표 증원이 필요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교직원, 학생, 노동자)가 학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공동체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학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향성 제시 등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어야합니다.

### -학생들의 무관심

2023년 12월, 총학생회장 선거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3월에 공고된 보궐선거 또한 입후보자가 없어, 현재 총학생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됩니다. 이는 평택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시기엔 대면활동이 없다보니 총학생회가 부재했다 해도, 코로나 이후 대면이 활발해졌지만 여전히 학생 자치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국민대, 이화여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각종 대학들이 투표율 미달, 낙선 등을 이유로 장기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20대는 각자에게 이익이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와 동덕여대 공학 전환 문제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2024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는 입후보자 없음으로 선거가 무산되었지만, 이번 총학생회장 선거에서는 현 의대증원 문제 등으로 2명의 후보가 입후보를 하였으며, 한 후보는 의대 학생으로, 1300명의 학생들의 추천을 얻고 출마하였습니다.

학생들 개인에게 더 밀접한 영향과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총학생회 구조를 바꾸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총학생회 구조뿐만 아니라 학교의 운영구조, 체계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 □ 토론

### 평택대학교가 왜 공영형 사립대가 되어야 하는가?

하 태 원

평택대학교 민주총동문회 회장

#### 긍정적 이유

- 평택대학교는 1912년 일제 강점기에 미국 국적의 피어선 선교사가 인류애적인 사랑과 헌신, 가족의 사재로 설립됨.
- 당시 피어선 성경학원 유재현, 김동석 등 각 기독교 학교 학생이었던 13명이 피어선 성경학교에 모여 제 2의 6·10 만세운동을 추진하다가 고등계 형사들에 발각되어 체포.

#### 부정적 이유

##### 1) 구 재단

- 구 재단 조기흥 이사장 비리로 해임.
- 구 재단 조기흥 이사장 취임 전후로 재정기여 전혀 없이 설립자 행세를 하며 대학을 가족 및 친인척의 일자리로 일삼았고 해임 이후에도 잔당이 남아있음.

##### 2) 현 재단

- 현, 이계안 이사장의 선임조건인 기부금 기부 여부 불확실.
- 현, 이계안 이사장이 상근겸임이사로 등록하여 셀프 보수 지급.
-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론을 부정하고 1억이 넘는 교비 손실이 생겼으며 앞으로 더 많은 손실이 예상됨.
-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자료 공개 신청자를 협박하는 등, 투명하지 않은 학사운영을 하고 있으며 대학을 사유화 할 조짐이 보임.

#### 대학 구성원에 바라는 점

평택대는 피어선 선교사의 훌륭한 설립자와 비록 체포 되었지만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일했던 자랑스러운 동문을 소유한 대학입니다. 설립자 피어선 선교사의 유지를 받들어 평택대가 공영형 사립대가 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읍시다.

#### 평택시에 바라는 점

계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평택에 새로운 대학이 설립되기는 불가능 합니다. 평택대학교는 평택의 소중한 대학 입니다. 관심과 지원, 그리고 감시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이 되도록 연구하는 TF팀이 하루 속히 만들어 지기를 희망합니다.